



# 사법행정자문회의 제2차 회의 결과요지

2019. 12. 16.

운영지원단

## ◆ 사법행정자문회의 제2차 회의 개요 ◆

1. 일시 : 2019. 12. 12. 10:00~18:40

2. 장소 : 대법원 409호 회의실

3. 참석자

○ 대법원장(의장)

○ 김순석, 김진석, 박균성, 오승이, 윤준, 이광만, 이미경, 이찬희, 최한돈(이상 위원, 가나다 순)

○ 이한일(간사), 고원혁(서기)

4. 배석자

○ 이흥구, 박병민(이상 재판제도 분과위원회), 김정숙(사법정책 분과위원회), 견종철(재정·시설 분과위원회)

○ 최수환, 홍동기(이상 운영지원단장), 박노수, 강지웅, 정현미, 한종환, 양석용, 김보현, 유제민(이상 운영지원단원), 박상우 인사운영심의관, 도형기 인력운영심의관

5. 의사개요

가. 사법행정자문회의 운영 관련 공지 및 보고

1) 법원행정처 인원 현황 상세 보고(서면보고)



- 법원행정처 인원 현황을 서면으로 보고함
- 다음과 같은 이미경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법원행정처 구성 인원 중 1~3급 고위직에 여성이 한 명도 없고, 하위직인 6~9급에 여성이 많다는 것은 우리 사회 성평등의 한 지표가 된다고 생각함. 성평등은 인류 보편적 가치이므로, 사법부의 성평등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살펴본 후 앞으로 관련 분과위원회의 구성이나 안전 제안 여부를 구체적으로 고민하도록 하겠음

## 2) 사법행정자문회의 웹 공간 설치 경과 보고

- 한종환 기획조정심의관, 사법행정자문회의 웹 공간(코트넷 게시판, 대한민국법원 홈페이지 게시판, 위원 전용 공간) 설치 경과를 보고함
- 다음과 같은 위원들의 의견이 있었음
  - 위원들이 전용 공간에 안전 제안사항을 올리면 동의 여부에 대하여 위원들끼리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음
  - 안전제안 게시판을 만든다면, 게시글을 올렸을 때 메일링서비스 기능이 지원되었으면 함
  - 각 분과위원회의 회의결과 요지를 사법행정자문회의의 위원(외부위원 포함)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음

## 나. 지방법원 경력대등부 확대 필요성 및 바람직한 운영방안(소관: 재판제도 분과위원회)

### 1) 이흥구 분과위원장 기초발제

- 지방법원 경력대등부에 관하여 1. 경력대등부 확대 여부, 2. 확대 범위(적절한 사무분담), 3. 구성기준, 4. 바람직한 운영방안을 논의 쟁점으로



제시함

## 2) 쟁점 1, 2, 3에 관한 토론

○ 위원들은 재판제도 분과위원회가 제시한 기본방향에 전반적으로 동의하였고, 이에 더하여 다음과 같은 위원들의 의견이 있었음

- 업무량 증가로 인해 심각하고 무거운 사건을 주심이 주도하게 되는 문제 등 미흡한 측면이 있기는 하나, 경력대등재판부가 기존의 합의부보다는 낫다고 생각함
- 경력대등부의 기본 취지에는 공감하나, 경력대등합의부와 그렇지 않은 합의부 간 편차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경력대등부가 아니어도 실질적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 역시 같이 연구해야 함. 실질적 합의를 위해서는 프랑스의 연구담당관 제도처럼 재판보조인력이 판결에 대한 보고서를 만들고 그것을 기초로 합의를 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 같음
- 항소부에서 우선 시행하되 1심 합의부에도 확대할 필요가 있음. 1심 합의부를 경력대등부로 운영하려면 시행 초기에는 신건만 배당하는 등 배려를 할 필요가 있음
- 경력대등부의 성공적 운영(처리율이 떨어지지 않는 운영)을 위해서는 경력대등부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재판연구원 등 재판보조인력을 충분히 갖추어야 함
- 경력대등부 확대가 추세이긴 하지만, 사무분담을 각급 법원 사무분담위원회에서 정하는 상황에선 한계가 있음. 어느 정도 선으로 경력대등부를 꾸리는 것이 좋겠다는 강한 권고를 사법행정자문회의에서 하거나, 사무



- 분담에 관한 예규에 그러한 내용을 추가하는 방안도 논의할 필요가 있음
- 재판받는 입장에서 경력대등부는 매우 필요하다고 봄. 다만 경력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유능한 판사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경력만 고려하기 보다는 능력과 열정, 법관평가 결과 등 객관적 기준을 가지고 대등부를 꾸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음
  - 확대에 찬성하지만 판사들 사이에 공감대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각급 법원 판사회에서 논의하는 등의 절차가 필요함. 또한 고등법원에서도 대등재판부 확대가 신속히 이루어졌으면 좋겠음
  - 국민 입장에서는 판사에 따라 판결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 불만이므로, 경력대등부가 제대로 기능한다면 굉장히 신뢰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듦. 국민 입장에서 너무나 환영할 만한 제도인데 업무량 때문에 문제가 된다면, 현재 판사들의 업무량이 과연 적절한지 근본적인 질문을 해야 할 것 같음
  - 경력대등부 확대 실시를 위해 재판연구원 충원이 필요하다는 데 찬성하지만, 근본적으로는 판사 증원이 되는 것이 바람직함

### 3) 쟁점 4에 관한 토론

- 위원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력대등부 2년 근무를 원칙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별다른 이견이 없었음
- 또한, 재판장을 고정시키면 재판장 중심으로 경력대등부가 운영되고 경력대등부의 애초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할 수 있으므로 재판장을 고정시키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재판장과 주심은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다수를 이루었음



#### 4) 결정사항

##### ○ 경력대등재판부 확대 여부

- 2019년 시범실시된 경력대등재판부(법조경력 16년 이상의 판사 3인으로 이루어진 합의부)는 실질적인 합의 재판을 구현하여 지방법원 재판의 충실화에 기여하였고, 그 구성을 위한 인적 여건도 충분히 마련되었으므로, 앞으로 확대 실시가 바람직함
- 경력대등재판부가 그 취지에 맞게 충실히 운영될 수 있도록 재판연구원 배치, 형사기록 전자화 등 인적·물적 여건 조성을 위한 노력의 뒷받침이 필요함
- 경력대등재판부의 확대와 함께 앞으로 민사 사물관할 기준을 정비하는 등 한정된 사법자원의 효율적인 분배 방안 마련이 필요함

##### ○ 확대 범위(적절한 사무분담)

- 지방법원 항소 재판의 충실화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항소부를 경력대등재판부로 구성함이 바람직함. 다만 사건의 성질, 중요성, 사회적 영향력 및 법원 사정 등을 고려하여 제1심 합의부도 경력대등재판부로 구성 가능함

##### ○ 구성 기준

- 경력대등재판부는 희망을 우선으로 하여 구성하되, 희망자만으로 필요한 경력대등재판부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 종전 사무분담 내역 등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 때 법조경력, 연령, 성별 등을 다양하게 고려함이 바람직함

##### ○ 바람직한 운영방안

- 경력대등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년 근무를 원칙으로 운영함이 바람직함. 한편 단독화 우려에 대한 견제 장치로 재판장과 주심 분리가 바람직함

#### 다. 사법정책 분과위원회 회부 안전에 대한 연구검토 진행상황 보고

- 김정숙 분과위원장, 사법정책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진행 개요 및 논의 경과, 향후 일정을 보고함

#### 라. 청각장애인에 대한 수어통역비용 국고부담 방안(소관: 사법정책 분과위원회)

##### 1) 김정숙 분과위원장 기초발제

- 청각장애인에 대한 수어통역비용 국고부담 방안에 관하여 1. 규범충돌 상황의 해소를 위한 입법의 필요성, 2. 수어통역비용 국고부담을 위한 법률 및 규칙 개정 병행 또는 규칙 개정 방안을 논의 쟁점으로 제시함

##### 2) 토론

- 위원들은 사법정책 분과위원회가 제시한 기본방향에 전반적으로 동의하였고, 이에 더하여 다음과 같은 위원들의 의견이 있었음
  - 법률이 개정되면 좋겠지만, ‘대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헌법 제108조의 취지상 대법원규칙 개정으로 해결이 가능하다고 봄. 다만, 예산을 수반하는 규칙 개정이므로 예산당국과 사전 협의가 필요함
  - 재판 공개의 원칙 실현 및 대국민 사법서비스 향상 차원에서, 당사자는 물론 방청인에 대한 수어통역 방안 역시 고려될 필요가 있음

##### 3) 결정사항

- 청각장애인에 대한 수어통역비용 등의 국고부담 방안 마련 필요성

-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속기, 녹음, 녹화 및 통역 비용은 국고에서 지급하고 소송비용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기 전이라도 대법원규칙 개정을 통하여 국고부담화 하는 것이 관련 법률의 조화로운 해석상 가능하므로, 필요한 절차를 거쳐 대법원규칙 개정을 추진하기로 함

○ 예규 제·개정 안건 추가 회부

- 대법원규칙 개정이 이루어졌을 경우를 전제로 하여 그 이후 적정한 운영을 위한 예규가 정비될 필요성이 있으므로, 사법정책분과위원회에 관련 예규 제·개정 안건을 추가로 회부함

마. 법관에 대한 변호사평가에 관한 검토

1) 법원행정처 담당자 기초보고

- 이한일 기획총괄심의관, 법관에 대한 변호사평가 제도에 관한 연구·검토 및 인식조사 결과를 보고하고, 1. 현행 변호사회의 법관평가 제도개선 추진 여부, 2. 제도개선의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논의 쟁점으로 제시함

2) 토론

- 다음과 같은 위원들의 의견이 있었음

- 변호사회의 법관평가는 상당 기간 논의 및 수정 작업을 거치고 있고, 변호사가 실제로 관여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않고 있음. 해당 법관과의 개인적 친분관계, 해당 법관이 담당한 사건의 소송결과 (평가자에 대한 유·불리 여부)를 기재할지에 대해서는 논의 중이거나 앞으로 논의하도록 하겠음. 법관, 변호사, 외부위원 등을 포함한 분과위원



- 
- 회를 구성하여 향후 법관평가의 객관성과 적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법관 근무평정에 이용할 수 있는 근거자료는 많을수록 좋음.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 평가자료를 다변화하고, 근무평정을 법원장 1인이 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이 참여하는 평정위원회에서 담당하며, 평정 결과에 대해 불복절차를 마련하는 등 근무평정 제도에 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함
  - 법원장들의 찬성 비율이 높은 이유는 평정의 객관적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인 것 같음. 현행 변호사회의 법관평가에 대한 법원의 가장 큰 불만은 평가 결과의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점이므로, 이를 제고하기 위한 기준을 같이 만들어보았으면 함
  - 법관 외부평가를 제도화하는 데는 찬성하지만, 법관 독립과 관련된 문제이므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음.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마련한 후 인사에는 신중하게 반영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변호사평가를 기본적으로 실시하되 방청인 등 국민평가단에 의한 평가도 시범 실시하여 재판의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좋은 재판을 위한 하나의 방법이므로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법관평가는 재판의 독립과 관련이 있으므로 제도화하는 것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음. 변호사회에 의한 평가가 정교해져야 하고 법관들도 익숙해져야 하며, 그 전에 제도권으로 도입하는 것은 시기상조임
  - 지금 단계에서의 변호사에 의한 법관평가는 법원에서 그 결과를 받아서 연임심사 또는 평정에 반영할지를 재량으로 결정하는 정도가 괜찮다고 생각함. 사법행정자문회의에서 평가 필요성에 대한 결의를 하는 것은
-





성급하다고 생각함

- 외부평가 결과를 인사에 반영하려면 모든 법관에 적용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틀을 만들 필요가 있음. 또한 변호사뿐만 아니라 학계, 국민 등 평가 주체를 다변화할 필요가 있음
- 수준 높은 재판을 위한 것이라면 법관뿐만 아니라 검사, 변호사에 대한 평가 역시 필요할 수 있음. 인사에 반영할지 여부는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객관성과 공정성을 보완한다는 전제 하에 변호사평가에 찬성함. 다만 법관에 대해 외부평가를 시행한다면 이에 대해 해당 법관도 의견을 내는 등 방어방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3) 결정사항

- 국민이 바라는 ‘좋은 재판’을 구현하고 법관에 대한 자기 점검의 기회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법관에 대한 변호사평가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함
- 다만, 법관에 대한 변호사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작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준비기구 등의 검토를 운영지원단에 지시

※ 13:00경 오찬 관계로 정회

※ 14:00경 속개

바. 2020. 1. 기준 각급 법원의 정원 배정 경과 보고(소관: 재정·시설 분과위원회)

- 견중철 분과위원, 2020. 1. 기준 각급 법원의 법원공무원 정원배정 기준 및 구체적인 정원배정 결과를 보고함



○ 다음과 같은 최한돈 위원 의견이 있었음

- 앞으로는 사법행정자문회의에서 정원배정에 관하여 실질적인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업무 일정을 조정하였으면 좋겠음

## 사. 사법행정자문회의 등 신설에 따른 예산업무절차 개선 검토(소관: 재정·시설 분과위원회)

### 1) 견종철 분과위원 기초발제

- 예산요구, 예비금 지출과 결산에 관하여 사법행정자문회의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결산협의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예산결산협의회 설치에 관한 내규」 제정을 제안함

### 2) 토론

- 다음과 같은 윤준 위원 의견과 이에 대한 간사의 답변이 있었음
  - (의견) 향후 예산결산협의회가 신설되어 그곳에서 사전 검토를 하더라도 사법행정자문회의에 보고하기 전에 재정·시설 분과위원회를 반드시 거쳐야 할 것 같은데, 회의자료에 제시된 내규(안)에는 그 내용이 빠져 있는 듯함
  - (답변) 규칙상 예산요구, 예비금 지출과 결산에 관한 사항을 재정·시설 분과위원회에서 검토하려면 사법행정자문회의가 해당 안건을 분과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하므로, 그 점을 고려하여 내규(안)에 기재하지 않았음
- 재정·시설 분과위원회가 제안한 절차 흐름과 관련하여 의장은 아래와 같이 2020년 일정을 제시하였고, 위원들은 이에 동의함
  - 신설되는 ‘예산결산협의회’가 검토·의결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사법행정자문회의에 송부되면, 의장이 2020. 5. 1.경 사법행정자문



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하고 같은 날 온라인 의결을 통해 재정·시설 분과 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함

- 이후 재정·시설 분과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2020. 5. 14. 사법행정자문회의 임시회의를 열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의결하고, 이후 대법관회의에 상정하고자 함

### 3) 결정사항

- 사법행정자문회의와 기존 예산결산심의위원회의 예산·결산 관련 심의 기능이 중복되므로, 기존의 「예산결산심의위원회 설치에 관한 내규」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자문회의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결산협의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예산결산협의회 설치에 관한 내규」를 제정하기로 함

#### 아. 법원 청사 이전 등 사업의 연도별 신규사업 선정 및 우선순위(소관: 재정·시설 분과위원회)

##### 1) 건종철 분과위원 기초발제

- 법원 청사 이전 등 사업과 관련하여 1. 대구가정법원 청사 이전 신축 여부, 2. 대전법원 어린이집 법원 청사 내 이전 여부, 3. 중기사업계획 제출을 위한 연도별 신규사업 선정 및 우선순위를 논의 쟁점으로 제시함

##### 2) 결정사항

- 대구가정법원 청사 이전 신축 여부
  - 대구가정법원 독립청사의 신축 필요성은 인정되고, 신축 위치로는 제3 후보지로 이전하는 방안이 타당함. 다만, 현재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물을 임차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함
- 대전법원 어린이집 법원 청사 내 이전 여부

- 대전법원 어린이집 법원 청사 내 이전 여부 안건은, 현재로서는 이전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기로 함
- 향후 어린이집 신축 시에는 가급적 청사 내에 설치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중기사업계획 제출을 위한 연도별 신규사업 선정 및 우선순위

- 2021년 법원 청사 이전 등 사업과 그 우선순위에 관하여, ① 춘천지법 신축, ② 의성지원 신축, ③ 충주지원 신축, ④ 제천지원 신축, ⑤ 울산지법 증축, ⑥ 밀양지원 증축의 순서로 추진하기로 함

자. 법원공용차량 관리규칙 개정(소관: 재정·시설 분과위원회)

1) 견종철 분과위원 기초발제

- 대법원규칙인 「법원공용차량 관리규칙」의 차량교체 기준을 행정부의 그것과 일치시킬 것을 제안함

2) 결정사항

- 관련 절차를 거쳐 「법원공용차량 관리규칙」의 차량교체 기준을 행정부의 「공용차량관리규정」(대통령령)과 같이 개정하기로 함

차.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 구성 방안 및 향후 계획

1) 법원행정처 담당자 기초보고

- 박노수 사법지원총괄심의관,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 구성 경과 및 향후 계획을 보고함

2) 토론

- 다음과 같은 위원들의 의견이 있었음
  - 언론계에서도 적절한 인물이 위원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음



- 지방에 거주하시는 분을 추가로 영입할 필요가 있음
- 대규모 공청회 등을 통해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음
- 공청회를 법원이 주관하는 경우 국민들에게 설득력을 갖기 어려우므로, 대한변협이 주관하고, 법원과 학계는 패널로 참여하는 것이 나을 수 있음
- 선행 연구결과에 관한 보고서가 있으면 참고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이번에 외국 입법례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음
- 굉장히 부담스러운 주제이긴 하지만 그동안 논의가 많이 이루어져 이제 선택의 문제만 남은 것 같은데, 아무래도 가장 편하게 논의할 수 있는 곳은 학계이므로 학술대회나 세미나 등을 통해 활발한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음. 또 소송법을 연구하는 학자가 1명 정도 더 추가되었으면 좋겠고, 예산 등 협조를 위해 정부 측 인사도 추가되었으면 좋겠음

### 3) 결정사항

#### ○ 위원회 구성 관련

- 위원회를 아래와 같이 구성하기로 함(총 11명)
  - 전국법원장회의와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법관 2명
  - 대한변협의 추천을 받은 변호사 2명
  - 법무부의 추천을 받은 검사 1명
  - 전문성, 경력, 연령, 성별 등을 고려한 외부 전문가 5명
  - 국회 소속 전문가 1명 추가 예정

#### ○ 회부 안건 관련

- 위원회에 아래 세 가지 안건을 회부하기로 함

① 기존의 각종 상고제도 개선 방안의 장단점 검토 및 각 방안에 따른



## 영향 분석

- ② 법조인 및 국민으로부터 폭넓게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검토(연구·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절한 방식으로 의견 수렴 실시 포함)
- ③ 국민의 공감과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상고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검토(반드시 단일 방안일 필요는 없으나 향후 추진 가능할 정도에 이르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검토)

### ○ 향후 일정 관련

- 2020년 3월 사법행정자문회의 정기회의 시 그때까지의 위원회 연구·검토 결과와 그 이후의 연구·검토 계획에 관하여 중간보고할 것을 요청

## 카. 법원공무원 관련 분과위원회 설치 방안

- ※ 제안 위원: 최한돈(대표제안), 김진석, 오승이, 윤준, 이광만, 이미경(이상 가나다 순, 이하 같음)

### 1) 대표제안 위원 제안설명

- 최한돈 위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의 요청에 따라 아래 두 가지 분과위원회의 설치를 제안함
  - 법원구성원 근무조건 개선 분과위원회: 출산 및 육아를 위한 각종 지원 정책, 고질적인 법관 부족 현상 해결을 위한 방안, 합리적인 법원공무원 정원배정 기준, 법원구성원 수당제도 개선 등을 연구내용으로 함
  - 법원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분과위원회: 법원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방안, 법원공무원 직급구조 개편 방안, 법원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한 인사제도 개선 방안 등을 연구내용으로 함



## 2) 법원행정처 담당자 기초보고

- 도형기 인력운영심의관, ‘법원공무원 전문성 강화 분과위원회’ 설치(안)을 보고함

## 3) 토론

- 위원들은 ‘법원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분과위원회’와 ‘법원공무원 전문성 강화 분과위원회’에 대하여는 대체로 설치 필요성에 공감하였으나, ‘법원구성원 근무조건 개선 분과위원회’의 설치 여부에 관하여는 의견이 나뉘었음
- ‘법원구성원 근무조건 개선 분과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는 견해의 논거
  - 법원공무원의 사법행정 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설치할 필요가 있음
  - ‘집행’의 문제라고 모두 배제할 필요는 없음. 대법원장이 부의하는 안건, 자문회의에서 회부하는 안건 정도를 연구·검토할 수 있는 근무조건 관련 분과위원회는 만들 필요가 있음
  - 외국의 예와 비교해서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근무조건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함
  - 법관과 법원공무원을 왜 분리해서 이야기하는지 의문이 들고, 성평등 내지 일과 가정의 양립 차원에서도 고민이 필요함
- ‘법원구성원 근무조건 개선 분과위원회’ 설치가 적절치 않다는 견해의 논거
  - 근무조건 개선 관련 쟁점은 법원별·직급별로 다르고, 예산 등 복잡다기한 문제가 얹혀 있으며 정치적 성격도 있어, 분과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임

- 특정 현안이 있는 경우 특별분과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근무조건에 관한 분과위원회를 상설로 두는 것은 적절치 않음
- 근무조건 개선은 ‘집행’의 문제이므로 자문회의에서 다룰 사항이 아닌 것 같음
- 사법행정자문회의 및 분과위원회의 역할 및 성격, 법관과 법원공무원과의 관계와도 연관이 있어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인 것 같음

○ 의장은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음

- 현재로서는 분과위원회는 가급적 특정 과제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기구가 되어야 하고, 상설 분과위원회를 추가로 설치함에 따른 여러 부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시급한 과제가 있을 때 분과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 4) 결정사항

- ‘법원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 ① ‘법원공무원 전문성 강화 방안’과 ② ‘법원사무관 승진제도 개선 방안’ 총 2개 안건을 회부하여 연구·검토하도록 함
- 2개 안건 모두 보고 시한을 2020. 4. 말까지로 정하고, 2020. 5. 예정된 사법행정자문회의 임시회의에서 분과위원회의 연구·검토 결과를 토대로 논의하기로 함
- ‘법원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분과위원회’의 구성 시 외부 전문가를 포함시킬 필요가 있고, 구체적인 위원 구성은 의장에게 위임하기로 의견을 모음





- 함께 제안된 ‘법원구성원 근무조건 개선 분과위원회’는 그 연구내용이 분과위원회에서 논의하기에 적절하지 않거나 대부분 노사협의의 대상이므로 당장 설치하지는 않되, 앞으로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회부할 만한 적절한 안건이 있으면 그때 설치 여부를 논의하기로 함

#### **타. 부장판사 제도 운영 방식의 개혁에 관한 논의**

※ 제안 위원: 김진석(대표제안), 박균성, 오승이, 이광만, 최한돈

##### **1) 대표제안 위원 제안설명**

- 김진석 위원, 부장판사 제도 운영 방식의 개혁 방안을 안건으로 부의하여 재판제도 분과위원회와 법관인사 분과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제안함

##### **2) 토론**

- 부장판사 제도 운영 방식의 개혁에 관한 논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위원들 사이에 대체로 의견이 일치하였으나, 위 안건을 이번에 곧바로 분과위원회에 회부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뉘었음

##### **3) 결정사항**

- 위 안건을 분과위원회에 회부할지 여부를 내년 상반기 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하였음

#### **파. 사법행정자문회의 규칙 일부개정 건의**

※ 제안 위원: 오승이(대표제안), 김진석, 박균성, 이미경, 최한돈

##### **1) 대표제안 위원 제안 설명**

- 오승이 위원, 대법원장이 전국법관대표회의에 각 분과위원회당 2인 이상의 위원 추천을 의뢰하도록 ‘사법행정자문회의 규칙’ 제8조 제6항의 개정 건의를 제안함



## 2) 토론

### ○ 규칙 개정 건의를 반대하는 견해의 논거

- 전국법관대표회의에만 분과위원 추천을 의뢰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보다는 지금처럼 개방적으로 규정해 놓고 자유롭게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임
- 현재도 법관인사분과위원회를 제외한 모든 분과위원회에 대하여 코트넷을 통해 공개적인 신청을 받고 있음
-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자문기구이므로, 현행 조항을 가지고 조화롭게 운영하면 충분함. 전국법관대표회의에만 위원 추천을 의뢰하도록 강제하면 전국법원장회의 등과의 형평 문제가 발생함
- 사법행정자문회의의 규칙을 제정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분과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특별한 문제가 제기되지도 않았음

### ○ 규칙 개정 건의를 찬성하는 견해의 논거

- 공개적인 추천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분과위원회가 구성될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개정이 필요함
-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전국 판사들의 대표들로 구성된 기구이므로 여타의 회의체와는 다름

## 3) 결정사항

- 현 단계에서는 규칙을 개정하지 않고, 추후 필요한 경우 다시 논의하기로 함

### 하. 기타 개별 위원의 의견제시

- 다음과 같은 최한돈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차세대 전자소송 및 미래등기 사업은 그 내용이 중요하고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임에도 별다른 견제 없이 법원행정처 내부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보이므로 사법행정자문회의의 견제를 받아야 함
- 사법행정자문회의와 비슷한 기능을 할 수 있는 다른 위원회에 관한 규정(예: 사법발전을 위한 준비·실행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은 차제에 정비를 해야 함

○ 이에 대하여 윤준, 김순석 위원의 다음과 같은 의견이 있었음

- 정식으로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은 위원의 개인적 의견제시에 대하여 어느 선까지 논의를 해야 할지 정리할 필요가 있음. 정식 안건도 아닌 데 논의되고 회의록에 기재되는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음

○ 결정사항

- 원칙적으로 사법행정자문회의에서는 안건으로 부의된 사항을 논의하기로 함

#### 거. 다음 회의: 사법행정자문회의 제3차 회의(임시회의)

○ 일시: 2020. 1. 2.(목) 15:00

○ 장소: 대법원

#### 너. 비공개 또는 익명화 여부에 관한 의결

- 자문회의는 제2차 회의 회의록 작성시 ‘법원공무원 관련 분과위원회 설치 방안’ 안건에 관한 위원들의 토론 내용 및 ‘부장판사 제도 운영 방식의 개혁에 관한 논의’ 안건에 관한 일부 위원의 발언 내용을 비공개 처리하기로 의결함 <끝>